

■ 연구노트

주변에서 본 동아시아의 제국과 제국주의

- 홍노와 돌궐의 대중원정책 추이에 따른 변이양상 연구 -

정 창 원

제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주변에서 본 동아시아의 제국과 제국주의

-홍노와 돌궐의 대중원정책 추이에 따른 변이양상 연구-

1. 문제의식의 발로

본 연구는 기존의 제국 또는 제국주의의 길을 걸어왔던 중국 혹은 일본중심의 일방적, 종속적 역사인식 이후 등장한 국가와 영토, 그리고 민족이라는 한정된 주제속의 자아 중심적 역사인식에서 벗어나 동아시아의 역사를 주변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고, 중심과 주변이라는 일원적 역사해석의 테두리를 넘어 多元的이고 多中心的인 역사해석을 시도하고자 함이다. 이를 통해 서로의 역사에 대한 존중과 이해의 시각을 넓히고 나아가 미래 지향적 지역공동체 건설에 있어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근대 국민국가 성립 후 서구국가를 중심으로 한 '세계사'는 1980년대 이후 세계적 대전환을 맞아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역사 '지구사'의 시작을 맞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호응하여 90년대 이후 국내 학계에서는 "국가간 관계라는 수준을 넘어 서서 지역적 정체성을 사고"하려는 '동아시아론'이 대두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학문적 시도와 시각의 변화와는 별개로 동아시아 각국은 아직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민족주의와 애국주의의 굴레에 묶여 역사왜곡과 영토분쟁, 신중화주의의 대두, 군국주의의 부활 등과 같은 지역패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동아시아론 또는 동아시아 연구가 자국중심으로 이루어진 한계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동아시아의 제국과 제국주의 연구는 대부분 제국의 중심과 주체였던 중국의 중화주의와 일본의 제국주의 팽창, 그리고 침략성의 정당성과 부당성을 부각시키는 데에만 집중되어졌고, 주변의 대응양상도 주로 개별적 민족주의 저항이나 최근에 있어서는 협력이라는 부분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만약 현재를 우리가 국가를 넘어 인류의 생존과 평화를 추구하는 역사의 전환기로 인식한다면 그 전환은 당연히 자기 자신을 포괄해온 여러 체제의 해체를 포함하는 전환일 것이다. 이 전환에서 장래의 방향과 관련된 어떤 모색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과거를 반성적으로 성찰해 보아야 할 필요성을 가진다.

이를 위해 우선 동아시아라는 지역의 역사를 문명과 야만, 침략과 저항, 지배와 협력이라는 이분법적시각과 자기동일성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전통 중화제국과 근대 일본제국주의 시기 주변부의 대응양상을 종합적으로 재현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0세기를 넘기면서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이데올로기를 근거로 한 대립체제가 해소되어 제국주의적 기운이 감소되어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패권주의에 대한 욕망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쇠퇴와 함께 중국의 강력한 부상으로 인하여 크게는 세계질서의 구도변화를 초래하고 작게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재편을 요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중국, 일본, 러시아는 물론이고 미국까지도 이 지역에서의 주도권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금 중국이 대국으로 다시금 등장하고 일본 또한 그 영향력의 확대를 도모하면서 동아시아인의 역사적 기억 가운데 잔재한

중화제국과 일본제국주의의 이미지 또한 점차 되살아나고 있다. 이로 인해 상생과 협력이라는 시대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중심과 주변이라는 종속적 개념의 질서가 재등장할 것이라는 위기감 또한 자연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서로가 다중심적인 관계설정에서 벗어나 하나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하려 할 때 중심과 대칭되는 주변은 필연적으로 생겨나게 될 것이고 더하여 그 주변에 대해 전통적 華夷질서 혹은 일본제국주의질서의 강요와 같은 어두운 역사의 기억이 다시 살아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줄만 알았던 제국 혹은 제국주의에 우리는 왜 아직까지 그토록 우려하며 집착하고 있는 것인가. 무엇이 오늘날 동아시아 지역사회의 협력과 공동번영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역사에는 전면적 단절이 있을 수 없으며, 또한 과거는 현재를 상당히 구속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은 바로 동아시아인들이 미래지향적이고 다중심적(혹은 주변중심적)인 새로운 지역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제국 혹은 제국주의적인 일원적 질서체제로 회귀하고 말 것인가라는 당면한 문제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분석과 성찰이 필요한 시기이다.

2. 연구의 필요성

- 1) 이해와 공존을 위한 '동양적 제국', '동양적 제국주의'의 고찰.

지금까지 우리는 서양이라는 '타자의 시선'에서 동양의 제국과 제국주의를 바라보아 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서양에서 정

의 내려진 이론적 측면에서의 접근 즉 중국과 일본을 그 소재의 중심으로 삼고 서양이 중심이 된 세계관을 그 방법으로 택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면서 상대적으로 동양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면을 드러내고 말았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의 인식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어떠한 공통적인 매개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보편적인 개념의 '세계'라는 큰 매개체를 통하여 동아시아세계의 역사적 상관성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평등한 관계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아시아지역사회에서 함께 역사를 공유했던 '주변' 혹은 '다중심'의 관점에서 바라본 '동양적 제국'과 '동양적 제국주의'의 고찰이 요구된다. 특히 동아시아 내부의 중심과 주변으로 구성된 지배적 위계질서의 억압적 기능과 그로 인해 억눌린 다양한 주체의 역사적 기능성을 객관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점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2) 현실적 실천과제의 대응을 위한 주변에서 바라본 역사.

일반적으로 주변이라는 용어는 패권이라고 지칭되어지는 중심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단순한 지리적 위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시각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정치·경제·군사·외교방면 등의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말하자면 유럽중심주의에서는 자국과 자국민의 울타리를 넘어 유럽 또는 서양이 과거나 현재나 세계의 심장부라는 관념에서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개념이 될 수도 있고, 중화주의 관념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주변이 성립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근대이후 서양제국주의의 아시아 유입과 일본제국주의의 형성으로 인해 중화주의가 몰락하면서 일본을 중심으로 한 주변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중심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서의 주변은 중심의 체제, 문화, 언어, 의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중심의 이동에 따라 주변으로서 중심세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대응양상은 중심과 주변의 존재와 생존방식에 영향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국경없는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시대에 처한 우리는 동아시아 지역 현실이 역사적 실체로서 허용하고 요구하는 실천과제에 한층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먼저 오늘날 중심과 주변의 존재의미와 존재양상에 대한 고찰을 통해 주변에서 다시 동아시아세계를 바라보는 역사인식이 필요하다.

3) 중심의 이동에 대응하여 존속했던 주변의 역사를 통한 연속적인 역사상의 고찰.

정복과 피정복자는 각기 다른 문화적 토대와 사회구조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체제와 문화 수용은 자국의 정체성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기존 역사학의 접근은 지배체제나 지배정책과 더불어 그것들의 강요와 실시에 대한 부분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왔고, 피정복자들의 수용태도나 대응양상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전근대와 근대를 해석하는데 있어서도 제국과 제국주의의 문화를 거부하거나 저항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포괄적인 문화현상을 통하여 그 각각의 특징과 원인에 접근하려는 태도를 취하여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정복하여 커다란 영향력을 끼친다는 일원론적 해석과 전근대와 근대 또는 중국과 일본이라는 구분론적 태도를 지양하면서, 중심의 이동에 대응하여 존속했던 주변역사의 고찰을 통해 문화현상이 동아시아의 전근대와 근대를 잇는 과정 속에서 연속적으로 움직여졌던 원리와 체계의 역사상을 근원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정복과 피정복 사이에

각각의 문화나 체제가 양국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의 문화수용 과정 속에 나타난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4) 화해와 상생을 지향하는 글로벌화를 대비.

오늘날 글로벌이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사용되면서 탈냉전, 탈패권주의를 주창하고, 민족이나 민족성이라는 용어의 사용도 자제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중심과 주변의 구도는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2000년대에 들어서 동아시아에서는 일본과 미국의 안보문제, 경제, 군사강국으로서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중심에 대한 이동, 즉 또 다른 패권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실제로 학계나 언론에서 주창하는 탈패권주의와는 모순되는 것이며, 이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주변중심(혹은 다중심)적 역사인식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고래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형성된 각국의 체제나 사회적 흐름은 서로의 지정학적 특성과 요구에 의해 진행되어 왔고, 이것은 전근대 사회에서 동아시아 사회의 흐름을 주도했던 국가와 그에 능동적으로 대응했던 주변국가의 정치적 또는 사회적 양상에서 기인한다. 때문에 우월·열등과 같은 경쟁의식에서 탈피하고 화해와 상생을 지향하는 지역공동체 수립을 위한 새로운 시대상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취하였던 융합과 저항의 관점에서 주변국의 형성과 그 대응양상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심과 주변의 인식에서부터 탈중심·탈경계의 흐름을 정확히 인지하고 성찰하는 것이 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되며, 역사인식의 확대를 통한 글로벌화에 대처하는 기본적 토대가 될 것이다.

3. 연구의 의미 및 개념에 대한 기본인식

본 연구에서는 '주변'이라는 관점을 통해 동아시아 역사 속에서 제국과 제국주의와 함께 공존했던 각 민족 또는 국가 간의 관계와 양상을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는 주로 서양에 의한 타의적 해석 혹은 중심에 의한 일원론적 분석에 주안점을 두어 사실상 연구시각적인 측면에서 다양성을 추구하지 못하였다. 다만 새롭게 대두되어진 '동아시아론'과 뒤를 이은 '주변'이라는 관념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정립의 연구가 점차 선을 보이고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을 적용한 실질적인 고증에 의한 연구가 부족하여 사실상 동아시아 세계 속에 존재했던 다중심적 역사인식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발굴해 내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변' 혹은 '다중심'이라는 관점을 '동아시아의 제국 혹은 제국주의'라고 하는 동아시아세계의 역사진행 과정 속에 투영하면서 하나의 중심에 치우친 일방적 역사이해의 틀을 뛰어넘어 주변의 시각으로 동아시아 각국 간의 영향과 상관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자 하는 특징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 번째, 새로운 관점의 지역사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의 전근대와 근대를 잇는 연속적인 역사상을 고찰함으로써 역사의 연속성과 단절성에 대한 논의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역사연구는 각자의 변천과정을 거친 후 스스로 보수성과 배타성을 지니게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기존의 제국 혹은 제국주의에 대한 연구는 자국의 이해를 바탕으로 발전해 왔고, 이러한 점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단절시켜버리는 결과를 불러오게 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동일지역의 동일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 자국만의 일방적 잣대를 제시하는 연구는 결국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식이 결여된 행위였고, 그로 인한 폐해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중국과 일본지역에서 스스로의 역사인식이 자아중심적이었고 타자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글들이 조금씩이나마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를 출발점으로 이타적이고 다중심적인 관점에서 실증적 지역연구가 진행되어진다면, 기존의 지역사연구와는 다른 의미의 해석이 가능해 질 것이고, 자아 중심적 역사해석의 오해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역사적 단절성 역시 조금이나마 이어지게 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주변으로부터의 관점에서 역사를 분석함으로써 역사의 주체와 피주체간의 상호관계 및 상호인식을 이해할 수 있다.

식민지배와 냉전으로 대표되는 20세기를 마감하고 ‘탈냉전’·‘탈패권’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21세기 초입에 들어선 지금, 우리는 동아시아를 하나의 지역공동체라는 관점에서 인식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 맞추어 근대 이후 동아시아의 역사를 단순히 1국의 개별사적 관점 혹은 각국의 특수성에 기초한 관점이 아니라 동아시아사 전반의 입장에서 재조망해 보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그 연구의 대상이 동아시아 3국(중국·일본·한국)과 같이 중심적 위치에 있었던 나라들이 주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전근대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차지하고 주도했던 나라인 중국의 입장이나 근대 이후 패권을 지향했던 일본의 입장에서는 지배자나 정복자로서의 정책과 체제, 명령체계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면서 그에 반한 양면성, 즉 주변부에서 겪어야 했던 전통과 현실, 수용과 저항 등과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양면성을 경험한 주변들이 바라본 제국 또는 제국주의에 대한 연구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역사적 특수성을 재검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동아시아 사회에서 제기되는 주도권 논쟁과 과거사 문제 등을 비롯한諸多 문제들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주변에서 바라본 제국과 제국주의를 통하여 침탈과 분쟁의 역사와 문화의 수용과 적용이라는 관점의 역사를 함께 고찰하고 이를 현대의 문화수용담론과 비교분석할 수 있다.

타자를 연구함에 있어 그에 대한 주체성을 부인한다면 연구 주체자는 타자의 역사를 자신들의 필연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타자에 역사에 필연의 인과관계를 적용코자 한다면 타자의 자유의지는 역사의 우연이라는 벽과 마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동아시아의 각국은 타자의 역사에 자신의 필연을 강요함으로 말미암아 침탈과 수용이라는 이분법적 역사인식태도를 견지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변부에서 중심을 향해 수용과 적용이라는 대응관점의 역사해석을 동시에 시도하고 기존의 시각과 비교함으로써 자국만의 작은 세계를 초월한 지역공동체의 보다 큰 세계 속에서 자아와 타아에 대한 표상을 재정립하고 이를 통해 현대의 문화수용담론에 대한 가치와 응용의 연계성을 판단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

네 번째, 동양적 제국 또는 제국주의의 실태과악을 통해 미래 동아시아 국가 간의 존재양상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동아시아의 역사에서 중심과 주변의 관점에서 시대를 구분하면, 중국이 중심이었던 중화세계 시기, 중심이 되고자 했으나 좌절된 일본제국 시기, 그리고 2차 대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화세계는 제국, 일본제국시기는 제국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중화세계는 일방적으로 강요된 지배-종속관계는 아니었으며 근대 세계에 출현한 제국주의적 지배관계 또한 아니었다. 조공 제도는 주위 민족에 대한 중국의 완전한 지배에서부터 동등한 관계, 심지어는 다른 민족의 우세한 상태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대외관계를 포함한다.

일본도 종래의 '華'로 정의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 서구문명을 도입하고 체제 개혁에 성공하면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식민지를 영유한 제국주의 국가로 상승했고, 중국은 열강에 의한 분할 대상이 되어 반식민지화의 길을 걸었다. 이 시기 구미의 식민지 지배 타파와 아시아 여러 민족의 해방을 명분으로 내세워 전통시대 중화세계를 대체한 일본은 대일본제국의 자급자족 경제질서(대동아공영권)을 창출하고자 했다. 이러한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은 서양제국주의 질서하의 패권과는 다른 전개양상을 띠고 있기에, 과거 동양의 중심이었던 중국과 일본을 둘러싼 주변부와의 다중심적 상관성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의 특수성을 분석하고 나아가 그 특수성이 현재까지 연속되어 나타나고 있는가를 관찰함으로써 동아시아 주도권 분쟁의 양상과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비록 기존 연구에 있어 중화제국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일련의 논쟁이 존재하고는 있으나 최근 출판되는 연구서, 예를 들자면 楊志剛의 『六合一統：中華帝國的崛起』(長春市：長春出版社, 2005)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秦의 성립을 제국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다.

제국주의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일본의 연구를 번역소개하는 것, 혹은 서양제국주의 이론에 대한 번역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 내용은 대부분 江口圭一이 쓰고 周啓乾, 劉錦明이 번역한 『日本帝國主義史研究：以侵華戰爭爲中心』(北京：世界知識出版社, 2002) 혹은 蔣堅忍이 저술한 『日本帝國主義侵略中國史』(北京：全國圖書館文獻縮微複製中心, 2002)와 같이 자신들이 근대 제국주의 일본의 침탈과정에서 피해자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 대만연구에서의 제국주의에 관한 연구 역시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이론체계나 독자적인 시각을 확보하기 보다는 矢內原忠雄著, 周憲文譯『日本帝國主義下之臺灣』(臺北市, 帕米爾書店, 民76)이나 鈴木隆史

著, 周啓乾譯『日本帝國主義與滿洲』(台北市, 金禾出版社, 民87)등과 같이 일본학자에 의해 일본의 제국주의지배양상을 분석한 연구서가 그대로 번역, 소개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근래에 있어서는 주변에 대한 세계사적 관점의 지역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陸韜이 主編한 『現代西方學朮視野中的中國西南邊疆史』(昆明市, 雲南大學出版社, 2007)에 실린 沈海梅의 「混雜的人群: 中國近代早期邊疆的社會變遷(1700~1880)」, 楊斌의 「全球視角下的邊疆歷史思考: 以雲南爲例」과 같은 글에서 이러한 관점의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현시대적 요구에 의해 동아시아 세계에 주목한 연구도 시작되고 있으나, 中國社會科學研究會編, 『21世紀東亞格局下的中國與日本=China and Japan under the East Asian formation of 21st century』(北京市,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와 같이 그 대상에 있어 미국과 중국 일본의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자아중심적 역사해석에 기초한 개별연구를 취합하고 구성한 연구서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근래 대만에서는 학술 사상적 관점에서 중심국가서의 중국을 다룬 甘懷眞編, 『東亞歷史上的天下與中國概念』(台北市, 臺大出版中心, 2007)과 吳展良編, 『東亞近世世界觀的形成』(臺北市, 臺灣大學出版中心, 2007) 등의 연구 성과가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주제는 중심에서 주변을 고찰하고 중심의 내용에만 치우쳐 있을 뿐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했던 주변부의 역사인식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20세기 초반의 열강들의 중국에 대한 침탈을 제국주의로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은 제2차 세계대전 후반까지도 미국이나 일본 소련의 중국에 대한 행위에 대해 동일하게 제국주의라는 행위로 비판하고 있다. 이는 제국주의에 대한 서구의 정의를 그대로 차용하여 비판을 가할 뿐 자신들 나름의 제국주의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과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표현되어진 제국·제국주의적 행위와는 동일시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연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다만 중국과 대만에서는 민족사적 혹은 지역사적 관점에 기초한 변강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는데, 충분한 개별 연구 성과를 기초로 여러 형태의 邊疆史地叢書(중국대륙)나 蒙藏委員會를 통한 연구총서의 발간(대만)이 이루어졌고, 대만중앙연구원의 각 연구소(민족연구소, 역사어언연구소, 근대사연구소 등) 및 기관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고구려연구재단에서 발간한 『중국의 민족, 변강문제 연구동향』을 통해 충분히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 역시 중심이나 주변에 대한 역사인식을 배제한 채 주변지역의 역사적 사실고증에만 치우쳐 있고, 기존의 중화제국 강역에 대한 고정된 인식하에서 변강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자아중심적인 역사해석의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4.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한 연구테마의 설정

가제 : 흉노와 돌궐의 대중원정책 추이에 따른 변이양상 연구

중국의 북방경계지역은 匈奴, 東胡, 烏桓, 鮮卑, 突厥, 契丹, 女眞, 蒙古와 滿洲族 등 북방민족이 장기간 활동하던 지역이다. 그들은 중원에 존재했던 제국과 오랜 기간 정치·경제·문화 등 諸 方面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이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북방민족 汗國들의 경제적 기반이었던 유목경제는 자연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위약성과 국부성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조건하에서 그들에게는 농업사회경제의 보충과 구함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대외발전으로 생존을 도모하는

것은 유목민족국가의 필연적인 궤적이 되었다. 특히 강대한 세력을 이루었던 흉노와 돌궐제국은 이러한 특색이 더욱 선명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중화제국의 對이민족정책에 관한 기존의 서술은 중화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그 세계관에 순응하는 이민족에게는 德化와 懷柔를, 저항에 부딪힐 때는 征伐과 鎮壓의 태도를 취해왔다는 중심론적이며 일방적인 관점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漠北을 중심으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였던 흉노와 돌궐과 같은 유목민족국가와 중화제국과의 정치관계는 이와는 다른 형태로 전개되었다. 특히 漢건국 후 제국의 가장 큰 위협으로 자리매김 했던 흉노와 수당시기 2세기에 걸쳐 북방지역의 패자로 군림했던 돌궐제국의 역사전개과정에서 중국이 전통적 對異民族 정책으로 그들을 성공적으로 제어할 수 있었던 시기는 그리 길지 않았다. 오히려 양자 간에 상호 대등한 관계뿐만이 아니라 북방민족이 중국을 압도하는 힘에 의한 정치관계가 성립 유지되었다.

대표적 巨視史家인 황인우가 '북방민족의 존재라는 큰 전제가 통일국가 진제국의 등장을 가능하게 하였고, 통일국가로서 북방민족에 대항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중원과 북방민족은 단순히 중화적 세계질서로만은 설명하기 힘든 역학관계가 존재했다. 이는 기존의 일원적이고 중심론적인 역사해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주제에서는 주변부로 치부되었던 흉노와 돌궐을 다른 한쪽의 중심으로 설정하는 대등한 관계 하에서 중화제국의 국력변화에 따른 그들의 대외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통시대 중국이 주도하였던 禮를 중심으로 하는 동양적 리더십(華夷질서)에 바탕을 둔 기존의 중국 중심주의적 해석에서 벗어나, 양자간 힘의 차이에서 진행되어진 정치·외교적 대응양상에 대한 실증적 변화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본 연구의 대전제인 '주

변'에서 중화제국을 바라보는 다중심적 관점에 의한 당시 북방 지역의 정체성 탐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고대 중국 최초의 대통일 제국이었던 秦과 그 뒤를 이어 등장한 漢제국 이후 성립되었던 唐·明·淸과 같은 역대 중화제국들은 자신의 정통성 확보를 위해 강역의 관념을 고수하였고, 주변과 차별된 중심으로서의 華를 강조하며 동아시아 세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이러한 관념은 華와 夷라는 중심과 주변의 분리로 대변되는 중화주의 역사관 속에서 확연히 나타나게 되었고, 이러한 점이 중국에서 기술되어진 다양한 역사서 속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華夏민족을 그 역사의 중심에 놓고, 그 주변은 異族으로 규정지어 비문명적, 야만적, 비도덕적으로 역사를 기술하고 있으며 그 華夏라 규정되어진 중심에서 멀어져 주변으로 갈수록 더욱 이질적인 곳이라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관점의 축적은, 그 토대위에서 기술되는 대중적 역사교재의 내용 속에 무비관적으로 수용되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중국과 대만의 대학에서 사용되어지는 역사교재에서는 「漢族을 중심으로 한 기타민족의 충돌과 융합이 중국의 역사와 문화발전의 동력이 되었으며 華夏·東夷·苗蠻이 서로 융합되어 華夏민족으로 형성되었고 이후 계속되어진 중국역사무대에 서 북방의 유목민족과 남방의 소수민족은 중원의 管理와 教化를 오랫동안 받아들였고, 중원으로부터 선진의 정치제도와 생활방식 등을 받아들이는 華化를 통해 문화적 민족 융합을 이루었다」(王仲孚)²¹⁾, 또는 「주변민족은 중원과의 경제교류를 절박하게 바라보고 있었고 이러한 점은 자연적 응집력으로 형성되면서 중원을 향한 발전의 동력이 되었다」(張豈之)²²⁾고 거침없이 기술하고 있다. 이는 한국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문화적인 면에서 분열시기

21) 王仲孚等著, 『中國文化史』, 五南圖書出版公司, 1997, 56-57쪽.

22) 張豈之主編, 『中國歷史的十五堂課』, 五南圖書出版公司, 2006, 99쪽.

에 나타났던 남북조시기의 胡漢의 문화는 수당제국에 의하여 중국적인 성격으로 재편되고 이후 당문화는 국제적 성격을 지녔다 혹은 당제국의 대외관계에 있어 '동으로 백제와 고구려를 멸하고 북으로는 돌궐과 위구르를 지배하였고, ... 6都護府를 설치하고 광대한 지역을 羈縻정책으로 통치하였다'(신채식)고 기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점들은 다중심(혹은 주변)에 대한 역사인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태도이며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이루어졌던 중심의 입장에서 주변을 조망하고 평가하는 중국중심주의(sino-centrism)적인 역사관이 역사교재 속에서조차 그대로 투영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흉노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흉노의 민족적 기원에서 시작하여 명칭에 대한 문제, 王號에 대한 문제제기(方壯猷, 『匈奴王號考』, 『燕京學報』8, 1930), 흉노문화에 대한 발굴보고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어왔다. 특히 근대적 학문개념으로써 흉노를 中國의 邊疆之學으로 파악하고 연구한 국가는 중국의 邊疆과 이해관계가 얽힌 일본(동북)과 러시아(동북·몽고·신강), 영국(신강·서장), 그리고 프랑스(운남·광서) 등이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중국의 변강을 연구하였다는 근원적 한계점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1930년 이후 중국에서도 흉노에 대한 연구자가 점차 늘기 시작하였는데, 語言學에 方壯猷, 文獻學에 馮家昇·谷霽光·王伊國·童疑, 地理學에 張印堂 등이 대표적이다(池培善). 흉노에 대한 종합적 고찰이 이루어진 연구로는 『匈奴「帝國」』(加藤謙一, 第一書房, 東京都, 1998), 『匈奴史研究』(武沐, 民族出版社, 北京, 2005), 『匈奴興亡之追蹤』(江鴻, 臺灣商務, 1987) 등이 있다.

· 對흉노 대외정책과 관련한 개별 연구로는 「漢與匈奴初期和親關係之遞變」(尹章義, 史苑, 1966-5), 「論新莽時期的漢匈關係」(曉克, 內蒙古社會科學, 1991-2), 「漢與匈奴第一個和親約考述」(葛亮, 中國邊疆史地研究, 1995-2), 「論西漢王朝對匈奴的定策與其國力興

衰的關係」(唐國軍, 廣西社會科學, 1996-2) 등 漢제국을 중심축으로 한 화친정책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돌궐에 대한 기본적 사료의 정리는 중국(『突厥集史上下』(岑仲勉, 中華書局, 北京, 1958), 『西突厥史料補闕及考證』(岑仲勉, 中華書局, 北京, 1958)), 일본(『騎馬民族史』, 內田吟風, 田村實造等譯注, 平凡社, 東京都, 1971~1973) 등지에서 일찍부터 이루어져 돌궐사 연구의 기초적 토대는 비교적 조기에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기초를 바탕으로 돌궐사를 종합적으로 고찰한 대표적 연구로는 護雅夫의 『古代トルコ民族史研究』 I (山川出版社, 東京, 1967)와 林恩顯의 『突厥研究』(臺灣商務印書館, 臺北, 1988)를 비롯하여 이들의 다양한 연구논문들을 들 수 있다. 이 중 護雅夫의 관점은 수당과 돌궐의 관계를 중심의 문화와 문물이 주변부에 과급되게 한 책봉체제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이로 인한 수당제국의 세계성을 강조하는 점에만 머물러 있어 일원적 역사해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수당제국시대 돌궐에 대한 연구의 대표적인 시각은 당제국의 羈縻정책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대표적으로 당의 세계제국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진행되어진 일본학계의 접근²³⁾, 그리고 통일적 다민족국가 통치의 지혜를 얻으려는 현실적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민족문제에 대한 중국학계의 접근이 보인다(『試論唐太宗的民族政策』(魏國忠, 北方論叢, 1979-5), 『唐代民族政策初探』(熊德基, 歷史研究, 1982-6), 『唐太宗民族政策局限性』(胡如雷, 歷史研究, 1982-6)). 그러나 이들의 입장은 대체적으로 당과 북방의 관계를 일종의 主客관계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분법적이고 당에 그 중심을 둔 일방적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김호동에 의

23) 이 문제에 대해서는 『隋唐帝國と東アジア世界』(唐代史研究會編, 東京, 1979)의 「總說」을 참조

해 북아시아 유목사회의 관점에서 기미체제의 구체적 기능에 접근하여 분석한 연구(唐의 기미지배와 북방 유목민족의 대응)도 보이는데 이는 중국과 일본의 연구보다는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다.

중화세계의 질서를 관장하는 덕치이념에 따르면 정치는 어디까지나 도덕에 의한 교화인 이상 ‘文治’야말로 ‘왕도’로써 올바른 정치이며 ‘武’에 의한 권력적인 지배는 ‘霸道’로써 부정되어야 한다. ‘무’는 반드시 덕치를 수용하지 않고 안경을 혼란시키는 것에 대한 ‘징벌’로서 행사된다. 이 배경에 힘의 대소 및 강약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힘’은 어디까지나 ‘징벌’로밖에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지닌 의미는 적지 않았다. 중국왕조가 군사행동을 일으킬 때에는 유덕자인 황제의 군사행동인 이상 그것이 ‘징벌’인 점을 스스로 천명해야만 했다. 그러나 징벌이라는 측면은 비단 중화제국의 입장에서 주변부에 대해 채택되어진 정책만은 아니었다. 주변부를 구성하면서도 진한제국에 필적할만한 또는 능가하는 역량을 지녔던 흉노·돌궐제국은 오히려 중화제국에 대한 ‘징벌’을 감행하기도 하였다.

통일이전시기부터 흉노의 존재는 중원의 각국에 부담으로 작용하였으며, 진시황의 통일제국 완성 이후 제국은 그 주변부에 대해 대대적인 공세와 함께 만리장성의 수축과 직도의 건설이라는 대토목사업을 일으킨다. 그러나 기원전 210년 진시황의 사후 찾아온 제국의 혼란을 틈타 흉노는 다시금 제국에 대해 군사적 충격을 가하게 되고, 西漢제국의 성립초기에도 군사적 힘을 바탕으로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 우세한 지위를 점하게 된다.

文·景帝시기 축적된 국력을 바탕으로 한무제가 대대적인 흉노 정벌을 감행하고 한편으로 흉노내부의 분열이 시작되기 전까지 西漢의 통치집단은 대흉노 관계에 있어 우세를 점하지 못하고, 그 보완적 대응책으로 和親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상술한 역사적 사실은 비록 중국측 사료에서는 완곡히 표현되지만,

이러한 점이 당시의 중원과 북방지역의 국제질서가 중국의 전통적 화이질서를 기준으로 삼아 주도한 것이 아닌, 흉노의 힘에 의한 두 개 중심 간의 대등 혹은 중원의 열세적 대외관계였다든 점을 부인하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다. 즉 흉노제국이 융성하게 됨에 따라 중원이 취해왔던 전통적 방식의 '변방경영' 방식은 수정되어질 수밖에 없었고, 군사적으로도 열등한 지위에 놓여 졌던 것이다. 따라서 당시의 동아시아 세계는 양대 세력으로 분할되었고, 중국은 강력한 통일국가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주도권을 가질 수 없었다. 西漢초기의 한·흉노 관계에서 한나라는 사실상 흉노의 조공국이었으며, 이는 곧 중심과 주변의 경계가 허물어진 하나의 큰 사건이었다는 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진한제국과 수당제국 사이에는 5胡16國 시대라는 유목민족의 국가성립시기가 존재하며 胡漢의 문화가 혼거하는 시기를 거친다. 혼란기를 거쳐 중국은 다시 수당제국으로 재통일되고, 수당제국의 북방에는 진한시기 흉노의 힘을 능가하는 돌궐제국이 존재하였다.

북방민족이 힘의 우세를 바탕으로 중원과 대등한 관계설정을 이루는 현상은 수당제국시기 돌궐과의 관계 속에서 재현된다. 수당제국시기 중원이 돌궐을 기미정책으로 제어할 수 있었던 기간은 약 50여 년에 지나지 않았고, 특히 약2세기에 걸쳐 중앙아시아의 패자로 군림했던 돌궐제국기에는 양국 간의 상호 대등한 관계를 뛰어넘어 오히려 돌궐이 중원제국을 압도하면서 唐이 稱臣을 하는 양상까지 등장(新唐書)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외관계가 성립, 유지되었다. 수당제국과 돌궐제국은 서로의 이해와 처해진 시대 상황에 따라 때로는 화친을 때로는 離間(對돌궐)과 分化(對수당)政策을 사용하며 당시의 국제관계를 이루어나갔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중국-북방 관계는 중심의 주변부에 대한 일방적 지배라는 렌즈를 통해 투영된 것이다. 위와 같

은 인식은 남겨진 사료의 기술을 통해 이분법적 형태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주변부의 역사를 다시 파악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한다면, 고대중국의 주변부(특히 북방)이 그 나라의 자율적이고 자체적 법칙이 있었으며 역사 속에서 다른 하나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점을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상술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서술하고자 하는 논문의 예상 목차는 다음과 같다.

예상목차

1. 진한/수당제국성립기의 흉노와 돌궐
2. 흉노의 대중원정책 추이와 진한제국의 대응양상
 - 2-1 흉노의 공세적 중원정책과 진한제국의 초기대응
 - 2-2 한제국의 화친정책에 대응한 흉노의 정책 變異 양상
3. 돌궐의 대중원정책추이와 수당제국의 대응양상
 - 3-1 돌궐의 對수당 분화책 유형과 추이
 - 3-2 돌궐에 대한 수당의 이간·반간책의 추이와 대응 양상
4. 흉노와 돌궐의 대중원정책 추이에 따른 變異현상의 검토
5. 맺음말

■ 참고문헌

- 『隋唐帝國と東アジア世界』, 唐代史研究會編, 東京, 1979.
- 『匈奴「帝國」』, 加藤謙一, 第一書房, 東京都, 1998.
- 『匈奴史研究』, 武沐, 民族出版社, 北京, 2005.
- 『匈奴興亡之追蹤』, 江鴻, 臺灣商務, 臺北, 1987.
- 『古代トルコ民族史研究』I, 護雅夫, 山川出版社, 東京, 1967.
- 『突厥研究』, 林恩顯, 臺灣商務, 臺北, 1988.
- 『突厥集史上下』, 岑仲勉, 中華書局, 北京, 1958.
- 『西突厥史料補闕及考證』(岑仲勉, 中華書局, 北京, 1958.
- 『騎馬民族史』, 內田吟風, 田村實造等譯注, 平凡社, 東京都, 1971~1973.
- 『新 騎馬民族征服王朝說』, 山崎仁禮男, 三一書房, 東京都, 1999.
- 『北方民族史研究』, 孫進己, 孟廣耀, 盧明輝著, 中州古籍出版社, 鄭州, 1994.
- 『北方民族關係史論叢』, 盧明輝編, 內蒙古人民出版社, 呼和浩特市, 1984.
- 『北方民族史論叢』, 陳育宁, 湯曉芳著, 寧夏人民出版社, 銀川市, 1991.
- 『突厥稀見史料輯成: 正史外突厥文獻集萃』, 薛宗正輯注, 新疆人民出版社, 烏魯木齊市, 2005.
- 『突厥汗國与隋唐關係史研究』, 吳玉貴著, 中國社會科學出版社, 北京市, 1998.
- 『匈奴史料彙編』, 林幹編, 中華書局, 北京, 1988.
- 『匈奴: 古代遊牧國家の興亡』, 澤田勳, 東方書店, 東京都, 1996.
- 『유라시아 유목제국사』, 르네 그루셰, 김호동 외 옮김, 사계절, 1998.
- 『中國邊疆民族史』, 劉義棠, 臺灣中華書局, 臺北, 1969.
- 『突厥與中原朝廷和戰之研究-和戰因素之探討』, 林靜玉, 政大邊

- 政所碩士論文, 臺北, 1980.
- 「匈奴王號考」, 方壯猷, 燕京學報8, 1930.
- 「試論唐太宗的民族政策」, 魏國忠, 北方論叢, 1979-5.
- 「唐代 民族政策初探」, 熊德基, 歷史研究, 1982-6.
- 「唐太宗民族政策局限性」, 胡如雷, 歷史研究, 1982-6.
- 「漢與匈奴初期和親關係之遞變」, 尹章義, 史苑, 1966-5.
- 「論新莽時期的漢匈關係」, 曉克, 內蒙古社會科學, 1991-2.
- 「漢與匈奴第一個和親約考述」, 葛亮, 中國邊疆史地研究, 1995-2.
- 「論西漢王朝對匈奴的定策與其國力興衰的關係」, 唐國軍, 廣西社會科學, 1996-2.
- 왕명가, 「기원전 1세기~10세기 동북아시아 국가구조와 국제 질서; 유목민(遊牧民)의 선택(選擇)-흉노(匈奴), 선비(鮮卑), 서강(西羌) 유목 사회와 한(漢) 제국(帝國)의 상호 작용」, 『중국고중세사연구』, Vol.18.
- 김호동, 「당의 기미지배와 북방 유목민족의 대응」, 『역사학보』, Vol.137
- 지배선, 「흉노(匈奴)·선비(鮮卑)에 관한 2·3」, 『동양사학연구』, Vol.25.
- 정재훈, 「수문제(隋文帝)(581-604)의 통일 지향과 대외정책-서북 민족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Vol.13.
- 우덕찬, 「고대 북아시아 유목제국과 중국왕조간의 정치관계 변화에 관한 연구-돌궐과 중국 간의 정치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중동학회논총』, Vol.20.
- 변인석, 「수말당초(隋末唐初) 중국의 돌궐(突厥)에 대한 「칭신사(稱臣事)」의 학설사적 고찰」, 『동방학지』, Vol.80.
- 김호동, 「돌궐(突厥)·회궐사연구의 제문제」, 『동양사학연구』, Vol.25.